

# 정책네트워크 **내일**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문 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02-704-0518 / 010-4789-7485(홍석빈) / [www.policynetwork.or.kr](http://www.policynetwork.or.kr)

## 정책네트워크 내일-영남권 지역포럼 공동기획 세미나

■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영남권 지역포럼』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하 관련 내용을 토대로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한국 사회 구조개혁과 영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일시: 2013년 7월 6일 오후 2시
- 장소: 창원문화원
- 주최: 정책네트워크 내일/경남미래포럼/국회의원 안철수

### ■ 세미나 기초발제 요지

- 제 1주제: 『영남 정치의 희망 찾기』, 김태일 교수(영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 2주제: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체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 찾기』, 차재권 교수(동의대 정치외교학과)

- 토론: 백종국 교수(경상대), 진영우 상임대표(울산내일포럼)
- 사회: 김종현 교수(동아대, 부산내일포럼 상임대표)

## 제 1주제 발제 요지:

- 영남 정치는 지역의 개혁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가치와 이익이 대표되지 못하는 ‘대의(代議) 결손(缺損) 상태’에 처해 있음. 민주화 이후 영남정치는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보수적 성향을 띤 하나의 정치세력이 지역정치를 독점하는 구도. 그 원인은 ‘지역주의’인데 지금의 영남 정치지형에 있어 지역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권부권위주의에 의해 추진된 일관된 ‘호남배제’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동원의 결과임. 동원의 기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구조화 되어 옴. ▲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감정(emotion) 조장 ▲ ‘우리가 남이가’로 대별되는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형성 ▲ 특정 정당 지속 지지 과정에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내면화 되는 이념(ideology) 구조화가 그 내용임.
- 영남지역에서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진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정당화’라는 기치하에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성과 이면에 오류도 컸음. 첫째, 기득권 세력과 제휴하려는 전략적 오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밀라노 프로젝트’, 노무현 전 대

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 지역 개혁세력에 대한 수혜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실패) 둘째, 민원해결사적 접근(지역사회의 일반적, 공적 이해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분절적, 특수한 이해를 들어주는 대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실패인데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좋았을 것 셋째,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등 발전주의 아젠다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 주거, 일자리, 복지, 노후, 보건의료 등 생활과제에 소홀한 오류 넷째, 동진정책(전국정당화정책)이 정당이라는 정치적 기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

- 영남지역 정치지형에서 개혁진보세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 '호남 + 개혁'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결합(개혁정체성 강화) ▲ 선거제도 개혁(소선거구제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가치와 이익의 대의(代議))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검토 ▲ 석패율 제도 ▲ 중앙-지역의 비례대표 확대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 지역주의 구도를 깨고 진보개혁세력의 발전적 확장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외 '초광역적 발전 비전'을 만드는 것도 필요. 인구 1,300만 명(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인구 합)인 영남권에 더해 광주, 전라남북을 포함한 '남부권 초광역단위 경제공동체 구현 비전'을 의미함.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영·호남이 공동운명체적 교감을 형성한다면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개혁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 제 2주제 발제 요지: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지방정치 작동메커니즘은 시민과 대의기구인 지방의회가 배제 혹은 기능미비의 상황에서 시장(市長) 등 단체장 중심의 지배연합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이 단체장의 재선가능성 제고와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활용됨으로써 자원배분의 경제적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
-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첫째, 단체장만이 홀로 지방정치과정 주도 둘째, 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 셋째, 제도적 자율성이 제한된 지방정부의 소비지향적인 할당정치 집중 현상 넷째, 단체장의 개별적 교환 및 연대관계가 반영되는 전근대적인 귀속주의 정치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에 더해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수도권-지방 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 재생산 해 옴.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중앙집권식 일회성, 선심성 공약에 의한 지속성 한계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 지역발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지역 간 발전격차 해소 관점에서 지역경쟁력 강화 쪽으로) ▲ 지역발전정책 수립과정의 거버넌스화 모색 필요성 ▲ 중복투자 배제를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성 강화 ▲ 지방정치구조의 구조적 개선 ▲ 지역주의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구조 개선 ▲ 도덕적 해이에 빠진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제

및 처벌 강화책 마련 ▲ 지역발전 모델의 다양화 ▲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이념적 접근 지양 ▲ 공생과 연대의 원리 조화를 모색하는 진보진영의 발상 전환 등을 감안한 접근 필요

-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따뜻한 변화!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www.policynetwork.or.kr](http://www.policynetwork.or.kr))에서 ‘후원하기’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707호

<http://www.policynetwork.or.kr> · 02-704-0518 · 010-4789-7485